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번길 ○○-○(○○동)에서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20○○. ○○. ○○.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에서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를 실시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제8호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20○○. ○○. ○○.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이후 20○○. ○○. ○○.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에서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20○○. ○○. ○○.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 ○○. ○○.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 ○○. ○○. 청구인의 의견 제출과 20○○. ○○. ○○. 청구인 출석의 사실관계 확인 및 추가의견 청취를 거쳐, 20○○. ○○. ○○.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6개월(20○○. ○○. ○○. ~ ○○.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 ○○. ○○.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번 위반이 처음이며, 기존 사업자에게 양도양수 받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가 받은 처분까지 같이 승계되어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

나. 일반판매소는 대부분 이동판매차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하는 위반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중적으로 처분을 받게 만들고 있어 부당하다.

【 보 충 서 면 】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중 20○○. ○○. ○○. 적발 건은 본인이 공급한 등유가 차량용 연료로 사용될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동식 탱크에서 주문이 들어온 것에 대해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을 확인하고 납품한 것이다. 구매자가 불법 주유한 부분까지 판매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석유사업법 제8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양도·양수 시 최근 3년간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을 고지 받았으며,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다.

나.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일반판매소는 공급받은 등유 또는 경유를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해 일반판매소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에 주유·판매하는 것은 위반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덤프트럭에 주유한 행위는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이동판매의 방법을 위반한 사항이며, 경유 사용 차량에 등유를 주유한 것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명백히 다른 별개의 위반사항이다.

4.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는 20○○. ○○. ○○. 이 사건 업소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차량연료로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20○○. ○○. ○○.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4.5개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본부는 20○○. ○○. ○○. 이 사건 업소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로 석유제품인 등유를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20○○. ○○. ○○.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 업소의 위 위반행위들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6개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날짜	위반행위	위반차수	처분기준	최종처분
20○○.○○.○○.	제39조 제1항 제8호	1차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제39조 제1항 제10호	2차	사업정지 3개월	
20○○.○○.○○.	제39조 제1항 제8호	1차	사업정지 3개월	

라.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의 의견 제출과 20○○. ○○. ○○. 청구인 출석의 사실관계 확인 및 추가의견 청취를 거쳐, 20○○. ○○. ○○.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6개월(20○○. ○○. ○○. ~ ○○.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련법령 등의 내용

1) 석유사업법 39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와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의 행정처분기준은 사업정지 3개월로 하고, 그 밖의 경우 1회 위반의 행정처분기준은 사업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

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고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20〇〇. 〇〇. 〇〇.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를 판매한 사실 및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등유를 덤프트럭에 주유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10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20〇〇. 〇〇. 〇〇. 청구인이 등유를 공급한 이용판매차량에서 해당차주가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이 기존 사업자가 받은 처분을 승계하여 가중처벌 받게 되는 점에 대해 감경을 호소하지만, 석유사업법 제8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인도 해당 처분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기존 사업자의 처분이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은 법에서 정하는 위반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중적 처벌을 받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사용하는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 판매한 사실은 이동판매의 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주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 제10호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를 주유한 것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

제8호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4) 석유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행정처분기준 제1호 가.목에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3개월 기준으로 가산하여 4.5개월 및 행정처분 기간 중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또 다시 2분의1 가중되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